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충남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2017. 11. 23

지속가능발전 정책워크샵 III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처리 현황 및 방안

정종관



내용순서

1. 여건변화와 전망
2. 자원 순환형 사회 만들기
3. 자원 순환형 폐기물관리 전략
4. 폐기물처리 갈등관리 사례분석

여건변화와 전망

○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2012-21년) 수립과 집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권역별 광역화 추진에 따른 협의와 종재 기능 강화

○ 유기성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로 국가 규제 강화

- 음식물류 해양배출금지(2013년 시행)에 따른 처리시설 규제 및 관리강화
-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 및 음폐수의 혼합처리로 에너지화 방안 적극 추진(국비 확보계획 반영)

○ 자원순환 세부 시행계획 마련 후 부문별 집행 추진

- 산단지역 자원순환단지는 경제·환경·사회적 타당성 검토 후 고려
- 생활 속에 실천을 진제도 한 도민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인식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폐기물처리의 광역화 평가

기초자치단체 입장

- 당초 재정사업에서 시설용량 확장과 함께 광역화
- 국비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민자로 전환 추진
- 늦더라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광역화해야 함
-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해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 광역화의 연차적 시행은 어려우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통합화 추진
(국비 받아 한꺼번에 추진하고 사업기간 2년 고려)
- 수용가능시설로 우선 이송처리하고 단계적 광역화

지자체의 청소업무 평가

○ 청소시스템 변화 방향

-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간위탁·민영화 하더라도 세부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설계과정에서는 시장내의 또 다른 서비스공급자로서 표준원가를 산정·제시.
- 청소서비스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청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음식물류 처리방향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대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재정적인 부담 경감 방향 추진

지자체의 청소업무 평가

○ 직영과 민간위탁 등 청소시스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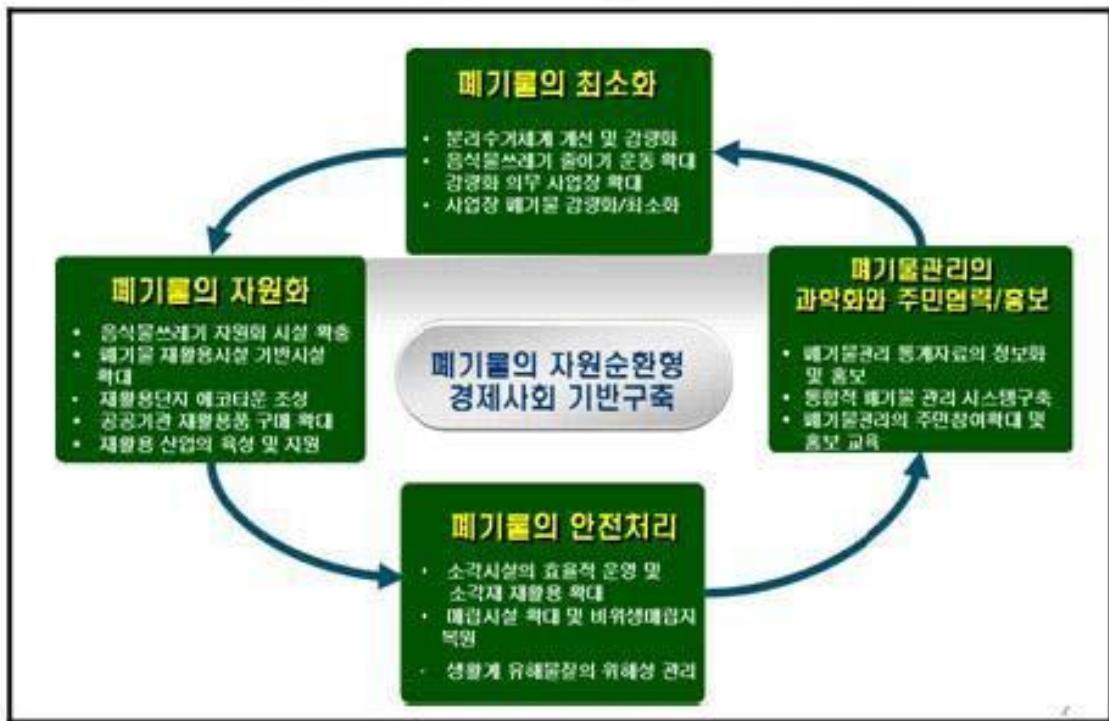
청소시스템의 효율성과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관심도, 청소예산의 부족, 청소차량의 노후화, 환경미화원의 고령화 등 지역여건 등의 SWOT분석 결과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해야 함.

○ 직영과 민간위탁 혼합 청소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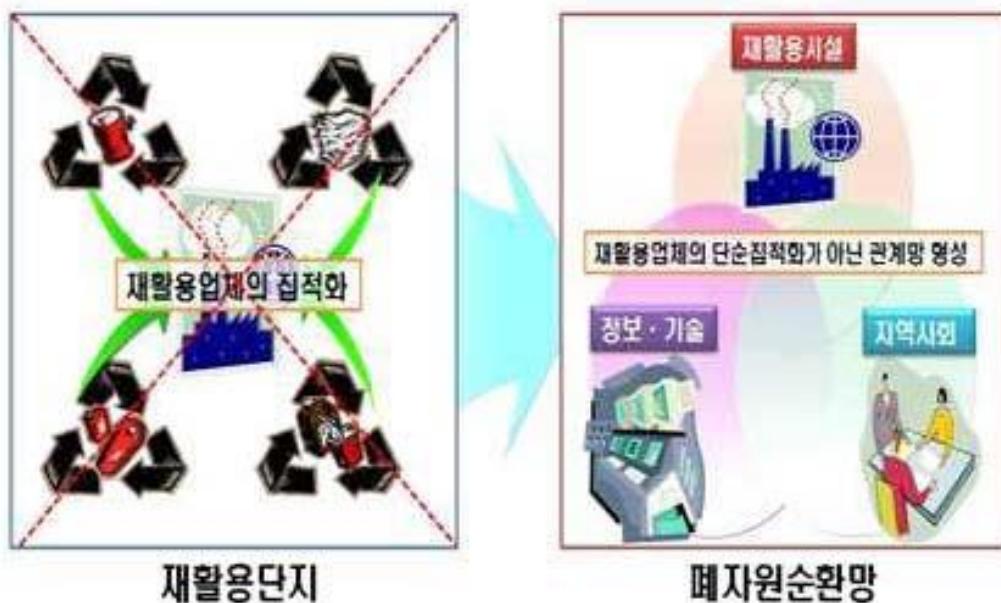
시장·군수가 구역을 분할하는 다중계약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업체들은 자기 구역내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고, 시군에서 기존업체를 교체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위탁할 업체가 없음.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부 위탁은 정부독점에서 민간독점으로의 수평이동만 초래해 비효율성(청소서비스 질의 저하 및 위탁비용 증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계약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자원순환형 사회 만들기



재활용단지와 폐자원순환망 비교



지역연계형 생태산업단지 추진

- 자원순환특화단지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에 의한 특수한 성격과 형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분담하여 업체들의 임대부지와 공동물류시설, 폐수처리시설, 관리동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지침
-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국책 기술개발사업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가칭)지역연계형 생태산업단지 개발 필요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2018년 1월 1일

폐기물 자원순환단지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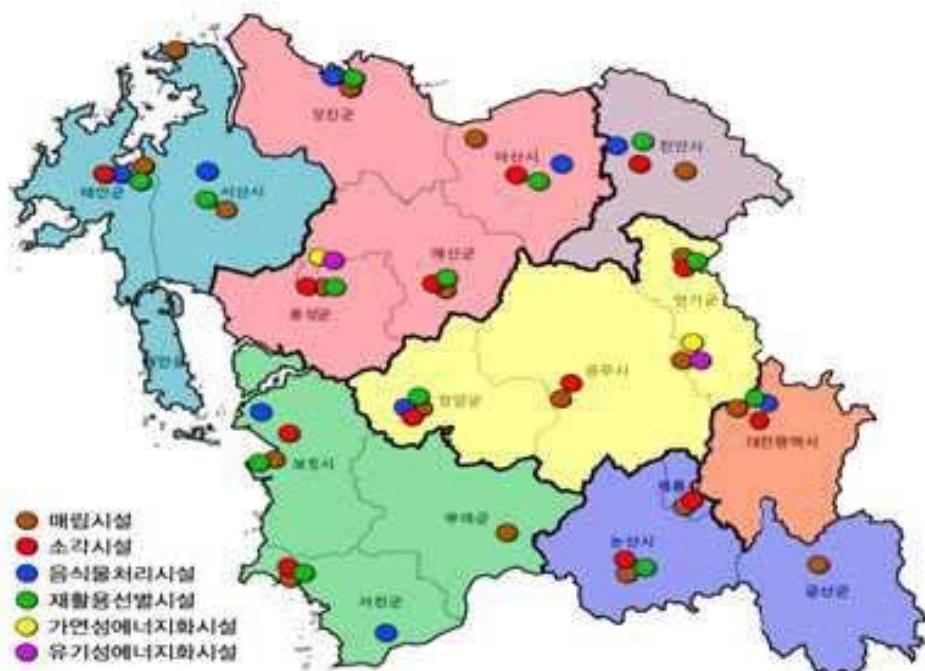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전략

① 지역특화 에너지 회수 지역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창출	② 자원화 단지조성 재활용 업체들이 입주하여 집적효과가 있는 단지조성 (폐기물 소각·전처리시설 등)
③ 지역협의체 구성 시군·재활용업체·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④ 운영·지원체계 온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기능 수행

11

3대 전략	세부 정책과제
자원순환의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1) 수립과 시행□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방안 추진□ 산단지역 자원순환단지 타당성검토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안전 강화□ 영농폐기물의 처리효율 향상(폐농자재, 농약병)□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추진(규제 강화대비)
생활 속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생활공감 정책 강화(폐가전, 휴대폰 등)□ 음식물쓰레기 증량제 시행 대비 감량화 교육□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로 순환성 제고

폐기물 최적화관리 방향(예시)



자원순환형 사회의 갈등관리 방향

사전갈등 영향분석	◇ 정책추진 전 갈등 요인 분석 등 갈등방지 대책 제시 - 이해관계, 장점, 합의형성절차, 핵심당사자 참여문제 등 → 주요시책 수립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 전문가 참여, 중립적인 자문역할 수행 - 시책추진 방향, 갈등의 원인, 해결방향 등 → 위원회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 권고
갈등조정회의 (권역별포럼)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자간 참여 조정협의체 운영 - 정보공개, 토론, 조정안제시 등 쟁점사항 해결 조정 → 자치단체간 협력지원체제 강화로 해결방안 모색
공공정책 수정, 보완	◇ 제시된 대안 등을 검토, 정책 수정, 보완 등 실시 - 정책적, 제도적 변경 등 우호적 환경 조성, 갈등 해소 → 효율적 갈등방지 및 해결체계 마련

폐기물처리 단지계획 추진절차



15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6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7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1. 개요

- * 사업기간: 2018년 9월 ~ 2021년 9월
* 사업내용: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 확장 및 신축
* 사업지역: 청진면 청진리
* 사업부수: 0~100t/일(100t/일 향후 증설 예상)
* 사업비: 2018년 12억 원(국비 10억 원, 자본 10억 원)
*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청진면 주민과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 회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처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대책

- *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는 청진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진면 회의체 회원과 함께 청진면 회의체 회의에서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는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는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는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 청진면 회의체: 청진면 회의체는 청진면 청진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18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피해 없게 할 것”

17/10/23

서산시장, 반대 주민 설득 비대위, 안전성 확보 요구

[서산] 이원섭 서산시장이 시청 앞에서 매일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집회를 하는 주민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서산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 마자마자 낮인 20일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보증 실명을 차차, “반대 집회를 하는 주민들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 반대 집회를 하려면 시장이 아닌 도청에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지화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도청에 가서 도지사에게 백지화를 요구하라”고 신경을 빼았다.

이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제구 역인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단단작원이 금강유역환경청 실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이 불산 2~3km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단자들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공문으로도 문서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 매립기간인 18년 8개월에 대해서도 매립용량이 차면 허가 기간과 상관없이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 이 없도록 시가 해야 할 일은 빠지지 않고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증 실명을 마쳤다.

현존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비상대책위는 서산시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잠자세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발화를 앞두는 등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

(가칭) 비산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산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세력이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된 공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GET HAPPY! IT'S GOOD FOR YOU!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